

해양수산 분야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세미나

해양분야 정책과제

2013. 5.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목 진 용

발표 순서







1. 국제 해양 이슈와 동향
2. 국정과제 및 추진 여건
3.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4. 추진 기반 강화



1. 국제 해양 이슈와 동향

1.1 주요국 해양전담조직 및 정책 강화

1.2 해양영토 확보 경쟁 심화

1.3 해양신산업 글로벌 선점 경쟁 치열

1.4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계기반관리 추진

해양패권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강화 및 신 해양정책 수립

4

미 국

- 2010. 7 국가해양정책 발표: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 2013. 4 국가해양정책 실행계획 발표: 국가해양정책 이행을 위한 연방기관들이 수행할 핵심적 조치 제시
  - 목표: 해양경제 활성화, 안전 및 안보 강화, 해양의 건강성 증진, 지역사회 지원, 과학의 발전 및 정보 개선

중 국

- 2013. 3 해양전담기구 위상강화
  -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및 국가해양국내 해경국 설치
- 2013. 4 국가해양사업발전 12.5 계획 발표
  - 목표: 해양종합관리능력 향상,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해양과학기술 리더 100명 육성)

일 본

- 2013. 3 총리 직속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 강화
  -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 기능 강화: 사무국의 기획능력 제고 및 민간참여
- 2013. 3 제2차 해양기본계획 수립
  - 해양자원 개발, 국경도서관리, 위성 활용, 자연재해 대응, 해양관광 촉진, EEZ 활용, 해양교육 등 강화

한 국

- 해양수산부 신설(1996.8), 해체(2008.2), 부활(2013.4)

해양영토 확보 경쟁 심화

5

세계 해양정세 변화

국가 간 해양 영유권 분쟁 지속적 증가

-UN해양법협약 발효이후 도서영유권, 해양경계획정, 불법어업등으로 인한국가간 분쟁증가
- 아르헨티나와영국의포클랜드영유권 분쟁
- 터키와키프로스의지중해 갈등지속
-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의도서 영유권 갈등

동북아 해양정세 변화

일본은 공세적 영토정책 추진

- 독도 분쟁지역화 가속: 국제사법재판소제소 추진, 교과서 왜곡, 순시선 침범, 독도상륙 시도 정도 심화
- 중국과 센카구열도, 러시아와 쿠릴열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
- 영토분쟁 전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해양패권 추구

- 남중국해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 지배력 강화
-센카구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 무력화 시도
-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

해양신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 치열

6

-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신산업 출현
  - 해양신산업은 해양에너지, 해양생물, 해저광물, 해수, 해양공간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신산업군
- 해양신산업의 현재 시장규모는작지만 방대한 자원잠재력 고려 시 향후 엄청난 규모 전망
  - 세계 해양에너지 시장만도 최대 1조 달러 전망(Frost&Sullivan)
- 세계각국은 해양신산업 육성을위해 해양과학기술 전략 수립 및 투자 확대
  - 해양과학기술 예산 : 중국은 우리나라의 4배, 일본 6배, 미국 27배 규모(2009년 기준)
  - 중국은 해양과학기술의 해양경제 기여도를 2010년 54.5% ⇒ 2015년 60%로 향상 추진
  - 일본은 2020년까지 2조 5천억 엔(36조 3,000억 원)의 해양개발 시장 창출 목표 설정

	추진 전략	주요 내용	MT예산(2009)
미국	해양과학R&D 기반조성 전략(2011)	2030년 대비 32개 연구주제 선정 및 R&D 기반시설 확보	10.4조원(27배)
중국	12.5(2011~2015)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2010)	5년간 해양개발, 해양신소재, 해양장비, 해양기술서비스, 해양관측 등 5개 중점 연구분야 제시	1.7조원(4배)
일본	해양자원에너지 확보 전략(2010)	심해저열수광상 34만㎢ 탐사 및 2020년 상업화	2.2조원(6배)
영국	해양산업 발전전략(2010)	해양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인력확보, 기술혁신, 제도기반 구축	-
한국	2020해양과학기술 로드맵(2011)	MT 투자방향 및 운영전략 수립	0.40조원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계 기반관리 추진

7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에 대한 관심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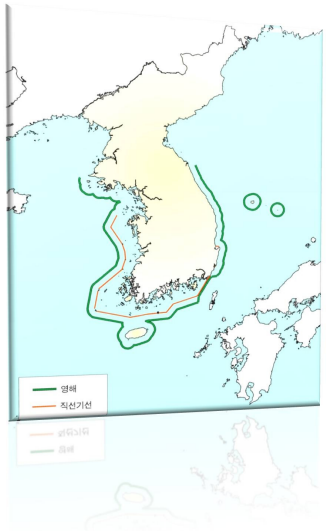
✓ 제5차 IPCC 예비보고서('14) 상 해수면 상승 예측 : 85~108㎝(4차 보고서, 최대 59cm)
✓ 태풍, 쓰나미, 해일, 해수면 상승, 침식 등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활발

해양생태계 기반 계획적 공간관리체제 강화

✓ UN주도 새천년 생태계평가 및 해양생태계 서비스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 UNESCO,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호주 등 MSP 구축 및 개발-보전 갈등 해결 수단으로 활용
. 해상풍력단지 적지 선정 시 에너지 생산성 외에 생태계서비스 손실 정도를 동시 고려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노력

✓ 국제사회는'20년까지 해양면적의 10% 보호구역 지정 및 공해상 보호구역 지정 추진
✓ 해양생태계 기반 부가가치 창출 및 공익 제고를 위해 생태계 복원 활성화
✓ 해양쓰레기, 육상기인오염 집중 관리로 생태계 건강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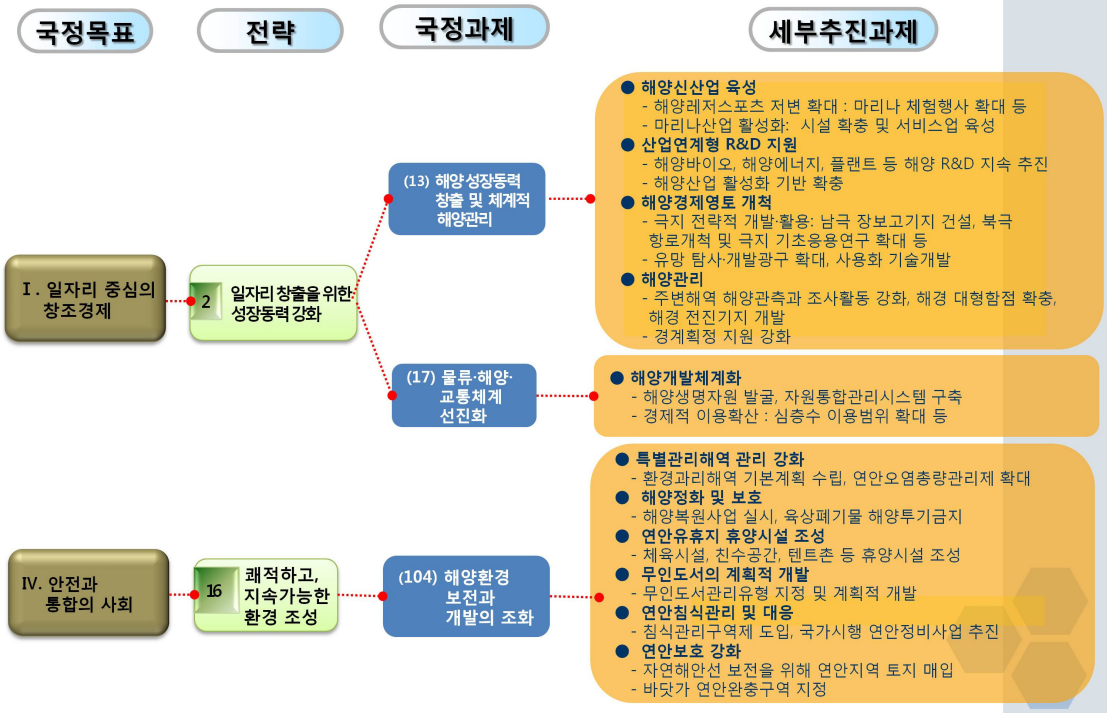


2. 국정과제 및 추진여건

2.1 국정과제

2.2 부문별 추진여건

국정과제 9



추진여건 10

해양영토

한·중·일 해양경계 미획정으로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마찰발생

- 중국 불법조업의 조직화, 집단화, 지능화, 흉포화 : 단속 해양경찰관 순직
- 중국 · 일본의 선박 및 항공기 진입 · 감시활동 증가

중국 및 일본의 해양집행력 및 영유권 강화

- 2013. 3월 중국은 국가해양국내 해경국 신설을 통해 해양집행력 강화
- 2013. 4월 일본은 제2차 해양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영토 확대에 전력

동중국해 제7광구 대륙붕 관련하여 한·중·일 간 갈등의 새로운 양상 전개

- 2012. 12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제7광구 지역에 대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한계 확장 정보 제출
  → 이에 대해 일본 반발

해양신산업

해양신산업의 경쟁력 미흡

- 해양에너지: 조력발전 외 기술력 및 상업화 실적 미흡
- 해저광물자원: 11.2만Km2 독점광구 확보, 그러나 상업생산 전무
- 해양생물공학: 국내시장규모 0.28억원(세계시장의 0.17% 수준)
- 해양플랜트: 건조부문 경쟁력 세계 1위, 그러나 서비스부문 저조

해양과학기술 수준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68% 수준 (6.7년 격차)

- 해양연구조사선, 잠수정, 해양관측위성 등 연구인프라 부족
- 해양 R&D 예산 부족

해양관광서비스 산업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부족

- 마리나/크루즈 항만 등 해양레저 인프라 부족
- 마리나 관리/서비스 인력 부족 및 인력양성체계 부재

추진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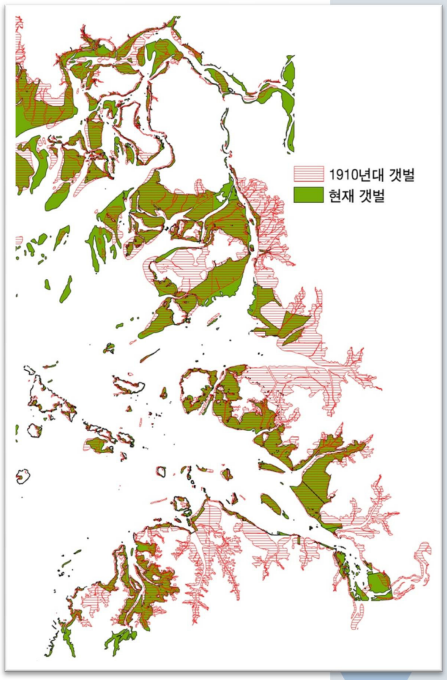
11

연안·해양공간

- 연안·해양자원 및 공간의 생산잠재력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 취약
  - 연안에 인구의 27%(1,300만 명) 거주, 국가산업단지의 83.8% 입지
  - 점·사용, 매립, 기타 이용현황에 관한 위치·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 부재
-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태풍 빈도/강도는 심화되고 있으나 사전예방적 재해 대응체제 미흡
  -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2.5㎜/yr: 세계 평균(1.8㎜/yr) 상회
- 고밀도 선점식 연안이용 개발수요는 증가하지만 합리적 조정메카니즘 미흡

해양환경·생태계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갯벌 감소(20% 이상)와 연안환경 훼손 지속
- 생명자원으로서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의 중요성 대두
  - ➢ 나고야의정서 채택과 해외생명자원 확보 노력 경주
- 수온상승에 따른 생물서식 및 양식 환경 변화, 외래종 침입과 교란
- 연안이용의 지속적 증가로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오염 지속





3.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3.1 목표 및 추진전략

3.2 중점 추진과제

목표 및 추진전략

13

신 해양가치 창출로 해양 강국 도약

해양영토	해양산업	연안 · 해양공간	해양생태계
▪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로 해양주권 강화 ▪ 관할해역 집행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해양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해양국부 창출 ▪ 고부가가치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해양공간의 창조적 이용으로 국민편익 증진 ▪ 재해에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간 조성	▪ 해양생태환경 복원 및 가치 증대 ▪ 해역 환경관리 역량 확대

해양영토 부문 중점 추진과제

14

1.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로 해양주권 강화

● **해양영토 주권 수호 전략 수립 및 대응**

- 한·중·일 EEZ 해양경계 획정 전략적 추진
-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 확장 대응전략 마련 및 독도, 동해표기 국제홍보 강화
- 해양영토관리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14) 수립

● **해양관측조사활동 강화 등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추진**

- 한반도 주변해역 광역과학조사 확대: 해양과학기지 신설, 정밀지형조사, 해양자원조사 실시
- 독도 주권 강화사업 지속 추진 및 이어도 관할권 강화 추진

  ※ 해경 경비력 증강 및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관리 유인화 추진
- 차세대 해양관측 위성 개발 등 해양영토관리에 인공위성 활용 확대

●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선도적 정책 추진**

- 범 정부 극지정책 상설위원회 설치, 극지 전담조직 보강, 북극이사회 옵저버 국가 진출
- 다양한 국제 극지공동연구 활성화, 심해저 및 남북극의 전략적 이용·개발
- 해외 유용생물 및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거점기지 선정 및 협력 강화

해양영토 부문 중점 추진과제 15

2. 관할해역 집행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관할해역 및 EEZ에 대한 해양경비 강화

- 해경 경비범위 확대: 한 · 중, 한 · 일 해양경계 미획정 해역까지
- 해경 경비역량 강화: 대형함정 및 고속단정 증강, 전용부두 및 전진 기지 확충 등
- 독도 및 이어도 위기 관리·대응 능력 제고 : 물리적 충돌사태 등 위기상황 대비

● 주변국과 EEZ의 조업질서 유지

- 관할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 영해침범, 불법 조업 등
- 중국불법어선 단속강화: 어업지도선 대형화, 해경 · 해군의 단속선단 구성 등
- 서해 5도 접경수역 어로활동 보호 및 우발사태 대응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강화

- "글로벌 해양영토 포럼" 창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제홍보 강화: 해양영토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해양산업 부문 중점 추진과제 16

1. 해양산업 성장동력화를 통한 해양국부 창출

● 해양과학기술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 정부 R&D 대비 5%(8천억원) 이상

- 2012년 기준 해양R&D 예산은 정부R&D 예산(16조 244억원)의 1.36%(2,172억원)
- 해양산업의 GDP 기여율 4.0%('10) → 6.1%('15) 달성

● 해양 연구인프라 확충

- 2천톤급 이상 해양연구선 추가 확보 : 4척 ⇒ 10척
- 5천미터급 유인잠수정 건조
- 해양위성 운영 : 1기 ⇒ 3기
- 심해공학수조 및 실해역 테스트베드 구축

● 해양신기술의 기술이전 및 상업화 지원체계 구축

-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기업의 기술개발 참여 시 사업우선권 부여, 세제혜택 제공, 기술이전 비용 지원 등
-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개발된 기술의 공공기관 우선적용으로 초기시장 창출, 해양R&D 연구기관의 기업 창업 제도화, 해양신기술펀드 조성,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 제도적 지원 구축
-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양산업 부문 중점 추진과제 17

2.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해양레저 수요 확산과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 해양레저 대중화를 위한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공간 확충
  ※ 매년 50만명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 내국인, 중국, 일본 등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양관광 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 해안누리길 정비, 도서관광 상품개발,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정비
- 국제 요트대회 개최, 한·중· 일 연계 해양관광상품 발굴

● 해양레저 기반시설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 국제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국내 마리나항만 네트워크 체제 구축
  ※ 마리나 항만 6개소 조성(거점)
- 크루즈항만 시설 확충, 크루즈터미널 친수공간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
- 해양레저산업단지조성, 해양 크루즈 · 마리나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해양레저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 레저보트 등록 · 검사제도 개선, 레저보트 임대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 근거 마련
- 마리나 · 크루즈항만 출입항체계 개선,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지원체제 마련

연안 · 해양공간 부문 중점 추진과제 18

1. 연안·해양 공간의 창조적 이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국민행복 증진을 연안 휴양공간 창조
- 국가소유 연안유휴지를 우선 활용하여 체육시설, 친수공간 조성하여 공공이용에 제공
  ※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 : 74개 지구, 1조 386억 원 규모
- 해수욕장의 4계절 이용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해수욕장관리법 제정

● 무인도서의 계획적 이용·개발을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
- 무인도서의 다차원적 개발:섬 체험관광, 양식거점화, 해양관측기지 설치 등
  ※ 관리유형 지정: 전체 무인도서(2,876개)의 약 30%(856개) 지정, 그 중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79개
- 해양영토 관리인프라 구축: 영해기점 무인도서 기본도 제작 등

● 고부가가치 창출형 연안 리모델링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연안환경 복원+기후변화(재해) 적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합형 연안관리 기술개발 추진
  ※ 미국 워싱턴 주 Wehatchee 시는 연안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방세 2백만 달러/년, 민간수입 1억5,200 달러/년 창출
  ※ 미국 NOAA(2013), 해양생태복원사업 1백만 달러당 39.7개 일자리 창출 효과

연안 · 해양공간 부문 중점 추진과제

19

2. 재해에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간 조성

● 기후변화로 가속되는 연안침식·침수 피해에 사전예방적 대응
- '연안침식 관리구역제' 도입, 복합형 연안정비사업 추진, 연안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도입
  ※ 2019년까지 연안정비사업 323개소(14,666억 원), 재해대응 사업 242개소(10,294억 원) 추진
- 침식모니터링, 효율적인 침식방지기술개발
  ※ 침식모니터링 확대: 172개소(2012) ⇒ 250개소(2017)

● 연안·해양 관리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복잡하고 다양해진 연안관리 정책 및 업무의 효율화 추구
  ※ 연안해역적성평가, 자연해안관리목표, 연안오염총량 기술검토, 무인도서 관리,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정비실시계획 심의, 해역이용협의 등을 지원
- 정책결정지원시스템(DSS) 구축: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개발업자가 활용
- 전 해역(EEZ를 포함) 해양생태계 기능 분류 및 서비스 가치 평가 후 이를 GIS화

● 연안개발·보전 수요의 합리적 충족을 위한 계획적 해안관리체계 정착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조기 정착 및 연안용도해역제 재정비
- 해양공간관리체계 및 해양지적제도의 도입

해양생태계 부문 중점 추진과제

20

1. 해양생태계 복원 및 가치 증대

● 훼손된 해양생태계 및 서식환경 복원
- 하구 복원 : 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적 생산성이 높은 거점 지역의 복원
- 연안습지 복원 : 경제 효율이 감소한 폐염전 등의 역간척 사업 추진
- 해양보호구역 확대: 20개(2013) ⇒ 29개(2017)
- 바다숲(해초, 해조, 산호류 등) 확대 조성 : 고유종의 산란장, 보육장 기능 강화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및 보호종 증식·복원
-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주권 강화 및 체계적 해외 해양생명자원 확보방안 마련, 유용자원에 대한 거점생물자원 기지 구축·운영
- 보호종 증식·복원 사업 : 생태관광 연계 및 수혜자 부담원칙 적용
- 고래류 혼획률 저감사업 : 불법 포획 단속 및 혼획방지장치(어구탈출장치) 부착, 혼획물에 세 부과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 및 기능 정립 : 통합·조정기능 강화 및 분관(특화 및 지역연구소)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 장기 해양생태계(주요 거점), 주요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 모니터링
- 생물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전략과 연계

해양생태계 부문 중점 추진과제

21

2. 해역 환경관리 역량 확대

●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확립

-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으로 관리체계 고도화
- 해양환경기준 개정, 육상오염원 관리 강화 등 전국 연안의 종합환경관리 체제 구축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성과 확산

※ 마산만(2007) ⇒ 시화호연안(2013) ⇒ 부산연안(2015)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비 등 안정적인 이행 기반 구축
- 총량관리 범위 확대 : 수질(COD) 중심에서 퇴적물(중금속 등) 관리로 확대

●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 시행

-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 및 하천 등을 통한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최소화
- 특별관리해역 대상 오염퇴적물 정화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
-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활성화



4. 추진기반 강화

4.1 중앙조직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4.2 지방자치단체 해양행정 협력 강화

4.3 해양 관련 법률 재정비 추진

4.4 해양 재원 확충방안 마련

4.5 해양정보 서비스체계 확대 구축

4.6 해양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4.7 해양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추진기반 강화

23

1. 중앙조직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기능분산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기상청)
유인도서	해양관광	조선, 광물, 에너지	기상업무
무인도서	해양레저스포츠	해양플랜트서비스	해상정보

해 양 수 산 부

통합조정

- 1단계: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 2단계: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2. 지방자치단체 해양행정 협력 강화

협력기반구축 지원

- 정부-지자체 해양행정 협의체 운영
- KMI 등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지자체 해양정책발전 포럼 개최

예산지원체계 점검

- 유사 지원사업 통합 조정
- 국비/지방비 비율에 대한 검토·조정
-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사업 자율 관리 확대

추진기반 강화

24

3. 해양 관련 법률 재정비 추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 법적 위상 강화 및 하위법령과 연계성 강화

현행 법률 → 제·개정 방향

- 연안관리법('99)
- 습지보전법 ('99)
- 남극활동및 환경보호에관한법률(('04)
-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05)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06)
- 해양환경관리법 ('07)
- 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07)
-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07)
- 공유수면관리및매립법('07)
- 해양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12)

부문	법률 정비사항
해양영토	해양영토기본법 제정
해양신산업	해양산업진흥법,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연안해양공간	해수욕장관리법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개정
생태계 환경	해양환경관리법(2-3개 법률로 분법) 해양생태계보전법, 습지보전법 개정 해양생명자원법 + 농수산생명자원법(수산) 통합

추진기반 강화

25

4. 해양 재원 확충방안 마련

(가칭)해양수산발전기금설치	▪ 현행 수산발전기금의 확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기존 재원의 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
(가칭)해양금융공사 설립	▪ 선박금융공사(설립예정)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개편 ❖ 자본금 : 2조원→4조원, ❖ 사업범위 : 선박 및 해운→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전분야
신규 재원 확보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해양환경 개선부문 투입 ▪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연안지역 환경개선에 활용 확대, 해양환경계정 신설 추진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사업에 투입

5. 해양정보 서비스체계 확대 구축

통합 해양수산 정보시스템 구축	▪ 해양자원 분포+해양환경+해저지질+해양기상+수산자원 등 해양관련 육해공 정보 통합 ▪ GIS 및 통계 기반의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해양경제 통계시스템 구축	▪ 해양산업 특수분류체계 구축 및 글로벌 표준화 ▪ 해양산업 총조사 실시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추진기반 강화

26

6. 해양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해양정책 대학원대학 설립	동삼동 해양클러스터 내 해양정책과 해양과학기술이 통합된 다학제적 대학원대학 설립(사례 : 일본 도쿄해양대학, 요코하마국립대학)
해양인력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지원	▪기존 대학 내 해양인력 양성과정 도입을 위해 특성화 대학 육성 ▪해양과학기술,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분야 등 전문가 양성과정

7. 해양교육 및 대국민 홍보강화

해양교육 기반 강화	▪ 교육과 문화진흥을 위한 해양교육문화진흥법 제정 ▪ 지역 특성별 교육-문화 클러스트 구축 ▪ 지속적 교육 추진을 위한 민간 단체와 유기적 연계 촉진
참여와 이해 증진	▪ 여성 및 타 분야 연구자 참여 확대 ▪ 국제기구 참여기회 확충 ▪ 교육 및 홍보 자료 계발·보급 강화 ▪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한 해양 정보 제공 지속 추진


감사합니다.
NATIONAL GEOGRAPHIC